의안번호	2212176
의 뢰 인	신장식의원
회 답 일	2025.8.20.
추계번호	25D4405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비용추계 결과

❑ 개정안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48억 1,700만원(연평균 9억 6,3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～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	944	935	957	979	1,002	4,817	963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6조 (윤리특별위원회)	– 의원의 자격심사・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둠(제1항) –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함. 이 경우 위원의 선임은 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정함(제2항) –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함(제6항)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46조 (윤리특별위원회)	○	–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❑ 개정안은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내용으로,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에 따른 지원 공무원의 증원인력에 대한 인건비, 기본경비 등과 사업비 등 추가재정소요 발생

❑ 윤리특별위원회는 1991년 5월 31일부터 「국회법」 개정(2018년 7월 17일) 이전까지 상설위원회로 운영된 바가 있어, 과거 운영된 사례를 활용하여 추계함

❑ 윤리특별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규모가 크지 않아 기존 국회 내 여유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에서 제외

❑ 개정안 부칙에서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기간을 추계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

❑ 상설화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공무원 조직은 과거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위원회로 운영된 당시 직제상 인원(총 6명: 수석전문위원 1명, 4급 1명, 6급 1명, 8급 1명, 9급 2명)을 참고하여 추정함

❑ 신규인력 6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은 공무원 보수, 기관부담금, 기본경비, 자산취득비임

○ 공무원 보수는 2025년 국회 인건비 예산을 참고[1]하여,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(2025년 7월)한 공무원임금상승률을 반영하고, 기관부담금과 자산취득비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기관부담금 비율, 공무원 1인당 자산취득비를 적용하며, 기본경비는 국회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(8.2%)을 고려하

1) 수석전문위원 및 4~5급은 기본연봉, 입법수당, 정액급식비, 직급보조비, 연가보상비를 포함한 금액이며, 6~9급은 봉급, 입법수당, 정액급식비, 직급보조비, 연가보상비, 성과상여금, 시간외 근무수당, 정근수당, 정근수당가산금, 명절수당을 포함한 금액임

여 산출하면 다음 표와 같음

- 공무원 보수는 기본연봉 및 봉급에 최근 3년(2023~2025)간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2.4%를 적용하고, 수당(입법수당 등)은 추계기간 동안 동일한 것으로 가정함
- 기관부담금(공무원연금,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)은 공무원 보수에 공무원 신규 채용 관련 기관부담요율[2]을 적용하여 산출함
- 자산취득비는 2026년 일회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증원인력 6명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(2024년 7월)한 정부기관 1인당 자산취득비 단가[3]를 곱하여 산출함

[표 2] 증원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: 2026～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보수	486	498	510	522	535	2,551
기관부담금	64	65	67	69	72	337
기본경비	40	41	42	43	44	209
자산취득비	30	0	0	0	0	30
합계	619	604	619	634	650	3,127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❑ 사업비는 2018년도 윤리특별위원회 운영경비 예산 2억 7,100만원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(2025년 7월)한 소비자물가상승률[4]을 적용하여 추계

[표 3] 윤리특별위원회 사업비: 2026～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사업비	325	331	338	344	351	1,689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2) 공무원 신규 채용 관련 기관부담요율(2025. 7.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
기관부담률(%)	13.066	13.130	13.194	13.286	13.380

3) 2026년 정부기관 1인당 자산취득비는 4,981,000원임

4) 2025년 1.9%, 2026년 이후 2.0%임

나. 추계결과

❑ 개정안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48억 1,700만원(연평균 9억 6,3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인건비 등	620	604	619	635	650	3,128	626
사업비	325	331	338	344	351	1,689	338
합계	944	935	957	979	1,002	4,817	963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Ⅳ. 부대의견

❑ 본 추계 결과는 2018년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위원회로 운영된 당시의 직제와 사업비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증원인력 및 사업비, 인력 재배치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Ⅴ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수연	김안나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수연	02-6788-4667	syjeon@assembly.go.kr